# 인프라 확충에도 광주 문화산업 제자리걸음

 광주·전남 대도약의 해를 열자

 〈2〉 문화전당 개관 선결 과제

#### 母문화산업 육성방안 찾아라

광주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10 년째 진행 중이지만 문화산업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문화전당 건립을 계기 로 미래 성장동력인 문화산업을 육성하려 는 컬쳐노믹스(Culturenomics)가 가시 적 효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펴낸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광주의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8026억5000만원으로 전국 매출액(85조 972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에 그치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출판·만화·음악·게임, 영상 등 문화산업 전반을 포함한 수치로 광주의 매출액 비

'갬코 사기 사건' 발목…행정기관 투자 의지 꺾여

전문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문화정책 재편 시급"

중은 전국 6대시 가운데 울산(0.5%)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사실상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경제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화부와 광주시는 그동안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문화전당권·KDB생명빌딩·대원빌딩· CGI센터권역 등 4개의 문화산업 투자진 흥지구가 대표적이다. 기업에 법인·소득 세 감면,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보장,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80 개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라는 데 있다. 이 가운데 30개 업체는 창업준비 단 계에 있는 1인 기업들이다. 그마나 초창기 증가하던 입주 업체수도 정체상태다.

광주시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영상문화복합관, 광주CGI센터 개관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나, 광주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의외로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3D컨버팅 업체 (주)이엠 아이지는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최근 (주)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을 해산하기로 해 폐업위기에 놓여 있다.

시가 전임시장 시절 추진한 3D 입체영 상 변환의 한미합작 투자법인인 이른바 '갬코 사기사건'은 문화산업의 발목을 잡 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사건이 확 대되면서 행정기관의 공격적인 투자 의지 가 꺾였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을 뒷받침해야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 광주문화재단, 한국문 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 관은 지역 문화산업의 '마중물'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광주의 약점과 강점을 반영한 문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문화전당 특수'가 가시화 하지 않아 문화산업 발전이 더딘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광주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다는게 문화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한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국 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한편, 문화 인 프라 공급자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 립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강진 하멜·진도만가 관광자원 육성

#### 亞문화전당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문체부 업무보고

정부가 강진의 문화자산인 하멜과 진도 만가 등 '남도 스토리'와 연계한 해양 관광 자원 확충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한다. 오 는 9월 개관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문체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과 방향을 보고 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핵심 관광콘텐츠 육성 방안을 밝혔다. 하멜트레일(Hamel Trail)과 진도 만가 등 지역의 문화・생태 등을 활용한 테마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

하멜트레일은 하멜 기념관과 하멜촌을 조성하는 등 관광자원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강진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멜은 '하멜 표류기'로 너무나 잘 알려진 네덜란드 선원으로 1653년(효종 4년) 국내에 들어온 뒤 병영성이 있던 강진에서 7년 동안 머물렀다. . 진도만가(전남도 무형문화재)는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기원하는 상여소리로, 출상할때 북·장고·꽹과리·피리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독특한 장례문화다.

문화부는 이밖에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 성장세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기론에 대 응하기 위해 '한류 3.0'을 실체화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을 올해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올해 2000억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해 공동제작을 확대한다.

문체부는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취지의 '작가보수제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창작지원 강화에 나선다. 은퇴자 경험을 활용하는 '인생나눔교실'과 '이야기 할머니 사업', 도서관, 박물관이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강좌 확대, 짧은 강연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는 'TED'의 한국판 인문 프로젝트 추진 등도역점을 두는 사업 분야다. 생활체육 기반확대를 위한 '생활체육포털' 구축과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결성, 또 종합형 스포츠클럽 10개소도 추가 설립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공립공원 등 무료 개방과 문화행사 할인 등을 통해 국 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목표로 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도 올해 확대해 시행한다. 작 년 대비 크게 늘어난 90억원의 예산을 토 대로 대표사업 육성과 각 기관들의 참여 확대, 생활문화센터 30개소 신규 조성과 문화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문화향유 저 변 확대를 추진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징역9년

대법원 원심 확정

RO 실체 인정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 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 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 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 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 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 동은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피고 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 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 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 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판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RO는 사건 제보 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 부는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 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이인복·이상훈·김신 대 법관은 "이석기 피고인 등이 선동한 것은 국지적 파괴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 가하기 어렵다"며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또,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 창석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구체적 공격 대상과 목표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체제 전복을 위한 폭동으로 나아가는 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며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재판 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 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중증환자,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 납세자연맹, 숨은 소득공제 항목 6가지 소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많은 직장 인들이 세부담을 우려하고 있지만 잘 찾 아보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6가지를 소개했다. 만 60 세 미만의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은 아 니지만 만약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 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이 333만 3333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이에 해당한다.

암이나 중풍, 치매 및 희귀난치병을 앓는 중증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에 더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최고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 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 하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 거나, 이혼으로 친권을 잃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재혼 상대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재혼으로 새어머니를 만났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삼촌·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외조부모는 상황에 따라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일반 근로 소득자가 복잡한 세법을 단시간에 공부해 공제항목들을 찾는게 쉽지는 않지만, 올 해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서류 를 제출하기 전에 놓친 공제를 찾는 게 중 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원인이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 때문이라며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이날 "지난번 세법개정 안 발표 당시부터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계속 공개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 및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 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